

## 사회관계망서비스 증가 따라 범죄 양상 지능화

(SNS)

익명성 이용 불특정 대상 폭력 갈수록 늘어… 가해자 찾기도 어려워 사후 규제보다 사전 예방만이 처방책… 피해 입었다면 정도 따라 신고를

#지난해 국민대에 이어 최근 고려대, 서울대 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여성 동기를 성희롱하는 사건이 잇 따라 타졌다.

이들은 여학생을 성적대상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서습지 않고, 몰래카메라 사진을 공유하다 적발됐다.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이버 폭력은 점점 더 다양하고 지능화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PC온라인과 모바일 기기 등 매체 발달, 카카오톡 · 페이스 북 ·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률 증가는 폭력의 양상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 장시켰다

사이버권리침해는 물론 실제적 범죄로도 연결되는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모욕, 초상권 침해, 사이버 스토킹 및 성폭력 등이 있다.

일부 대학에서 벌어진 '키카오톡 성폭력' 사건은 진화하는 사이버범죄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단체 채팅의 특성상 주류 분위기와 반대되는 입장을 내비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제동 없는 사이버 폭력을 낳

인격살인을 넘어 피해자에게 회복불능의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는 상황도 흔치않게 나타나고 있기도하다.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이용자들은 블로그나 이메일에는 기록이 남는다는 인식으로 책임감을 느끼지만 카카오톡에서는 상대방과 즉각적인 감정 표현이 이뤄지기 때문에 메시지의 휘발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록이 남긴 해도 다시 대화 내용을 뒤져본다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다른 SNS보다 약하다"고 설명했다.

사이버공간의 확장성도 사이버범죄의 특징이다. 온라인에 서는 상대방 인격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수정하는 일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소설 기능을 강조하는 모바일 커 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피해 확산 속도는 매 우 빠르게 진행된다.

사이버공간에서는 한번 정보가 유통되면 그 정보가 어디로 퍼져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삭제 요구 등의 대응을 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사이버폭력 사례가 늘고, 허위사실 유포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다. 무심코 누른 '공유버튼' 이 애꿎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다.

익명성도 사이버폭력의 주요 원인이다. 사이버공간은 가 해자들이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폭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익 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고 대처도 쉽지 않다. 익명성에 기대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 럼 위장해 피해를 확산하는 사례는 더욱 잦아지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익명성 문제는 최근 인기 연예인 박유천의 성폭행 사건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당시 피해 여성으로 추정 되는 사진이 SNS에서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사진 속 여성은 이번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평

범한 직장인으로 해당 여성은 경찰서에 사진 유포지를 처 벌해달라고 신고했다.

벌인은 증권사 직원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의 확장성과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는 더욱 증가하는 양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침해신고 유형별 분석'에 따르면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의 경우 2010년 3만8414 건, 2011년 3만2652건, 2012년 1만2915건, 2013년 3만5284건, 2014년 5만7705건으로 꾸준히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올바른 사이버 이용 교육에 힘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과 모바일 이용률 확대도 좋지만 이를 교양있게 사용하는 사이버 윤 리가 더 중요해진 시대다.

국회 미대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 어민주당)은 "방통위의 '2008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를 보니 국민 1인당 3번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국가와 기업의 태만한 대응으로 인해 불법과 탈법이 여전 히 횡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짜임새 있 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규제보다 예방이 근본적 처방

전문가들은 사이버폭력을 근절하려면 사후 규제보다 예방 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적절한 교육이나 제도 구축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야말로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영국은 악성댓글과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을 방치하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광고주 보이콧을 촉구하고, 시장지배 적 SNS 사업자에는 불량 게시글 신고 기능을 확대하고 관 련 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캐나다는 총리가 직접 나서 사이버폭력 대책 미련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 전공)는 "문제가 있다고 법으로 누르면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다른 데서 어떻게든 일이 터진다"며 "유명인 루머를 양산하는 한남패치" 강남패치"가 최근 논란이 되었는데이러한 일을 법으로 규제한다고 근절되지 않는다. 시간이고 말했다.

정한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은 '국내외 사이버 폭력 사례 및 각국의 대응방안' 논문을 통해 "인터넷상 표 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해외에서도 높은 반대 여론를 딛고 정부·사업자 차원의 사이버폭력 예방 움직임이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이용자 개개인의 윤리의식 이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사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이버폭력을 미리 막지 못했다면 문제가 더 커지기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정도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상담' 게시판과 '인터넷피해구제센터(국번없이1377및remedy.kocs cor.kr/ddmsindex.do)'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www.ctrc.go.kr/index.do)'에서도 사이버범죄 신고를 받는다.

지우고 싶은 인터넷 게시글이 있다면 자신이 작성한 콘텐츠에 한해 네이버, 다음 등에 요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한국판 잊힐 권리'를 도입하며 본인인증이 된 인터넷 게시글을 사후 삭제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욕설과 비방 등이 나타난 화면을 프린트 스크린(Prt Sc) 버튼을 눌 러 캡처해야 한다. 이때 어느 사이트, 어느 공간에서 사이버폭력이 벌어졌는 지 알 수 있게 인터넷 주소(URL)가 보이도록 찍어야 한다. 내용이 길어 한번에 캡쳐가 안되면 내용을 나누어 찍되 이 때에도 인터넷 주소가 보이게 해야한다.

기업들은 고객 개인정보보호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등 한번 빠져나간 고객정보는 스팸 메일 계정, 명의도용 SNS에 쓰이며 2차 피 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지는 "사이버폭력 피해·가해 연 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일선 하고에서 사이버 윤리 교육을 강화하면서 예방에 심 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만일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증거 를 수집하며 신고하는 등 현명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